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47
----------	------

발의연월일 : 2025. 3. 18.

발 의 자 : 박정현 · 김남근 · 박홍배
문진석 · 이재정 · 김현정
이광희 · 이학영 · 조승래
신정훈 · 김동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

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경호기구가 대통령의 친위대 성격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사법절차 방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정이라는 정체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변경하여

조직 설치 등의 규정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두도록 함

(안 제3조).

다. 경호구역 내 경호대상 외의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적법한 안전조치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6조부

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04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호의 조직·직무범위”를 “경호 업무의 직무범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를 “대통령경호본부(이하 “경호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호처”를 “경호본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통령경호본부) ① 이 법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호본부를 둔다.

② 그 밖에 경호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를 “경호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장”을 “경호본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장”을 “경호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처장”을 “경호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처장”을 “경호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경호구역에서의 안전조치) ① 경호본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다른 경호구역에 경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본부의 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내용이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호구역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호처”를 “경호본부”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처장”을 “경호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호처”를 “경호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을 “경호본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경찰청은 이 법 시행 전에 경호 업무 승계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경찰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호본부의 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경호처 소속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대통령경호처의 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대통령경호본부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경호의 조직·직무범위</u>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경호 업무의 직무범위</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소속공무원”이란 <u>대통령경호처</u> (이하 “ <u>경호처</u> ”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u>경호처</u> 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대통령경호본부</u> (이하 “ <u>경호본부</u> ”라 한다)----- -----. 4. ----- <u>경호본부</u> ----- ----- ----- -----.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u>대통령경호처장</u> (이하 “ <u>처장</u> ”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u>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② <u>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u>	제3조(대통령경호본부) ① 이 법에 따른 <u>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호본부를 둔다.</u> ② <u>그 밖에 경호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u>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생략)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본부-----
-----.

1. ~ 5. (현행과 같음)

6. -----경호본부의 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경호본부의 장-----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경호본부의 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

② -----
-경호본부의 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경호구역에서의 안전조치) ① 경호본부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에 경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본부의 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내용이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호구역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삭제>

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삭제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

<삭 제>

<삭 제>

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
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생략)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
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
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9조(비밀의 엄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경호본부-----

-----.

<삭 제>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
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
員)이 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
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
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
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

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령정년

가. 5급 이상: 58세

나. 6급 이하: 55세

2. 계급정년

가. 2급: 4년

나. 3급: 7년

다. 4급: 12년

<삭 제>

라. 5급: 16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

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
다.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
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
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
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삭 제>

<삭 제>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
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
협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
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
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
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

<삭 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경호본부의 장-----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
회) ① -----

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 · ⑤ (생략)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호본부-----

-----.

② -----위원장 1명-----

-----.

③ -----경호본부의 장-----

-----.

④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
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
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
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
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
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
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
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
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
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서 위해를

<삭 제>

<삭 제>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
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
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
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
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
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
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
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

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
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
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
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
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
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
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
여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삭 제>

산상의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

<삭 제>

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